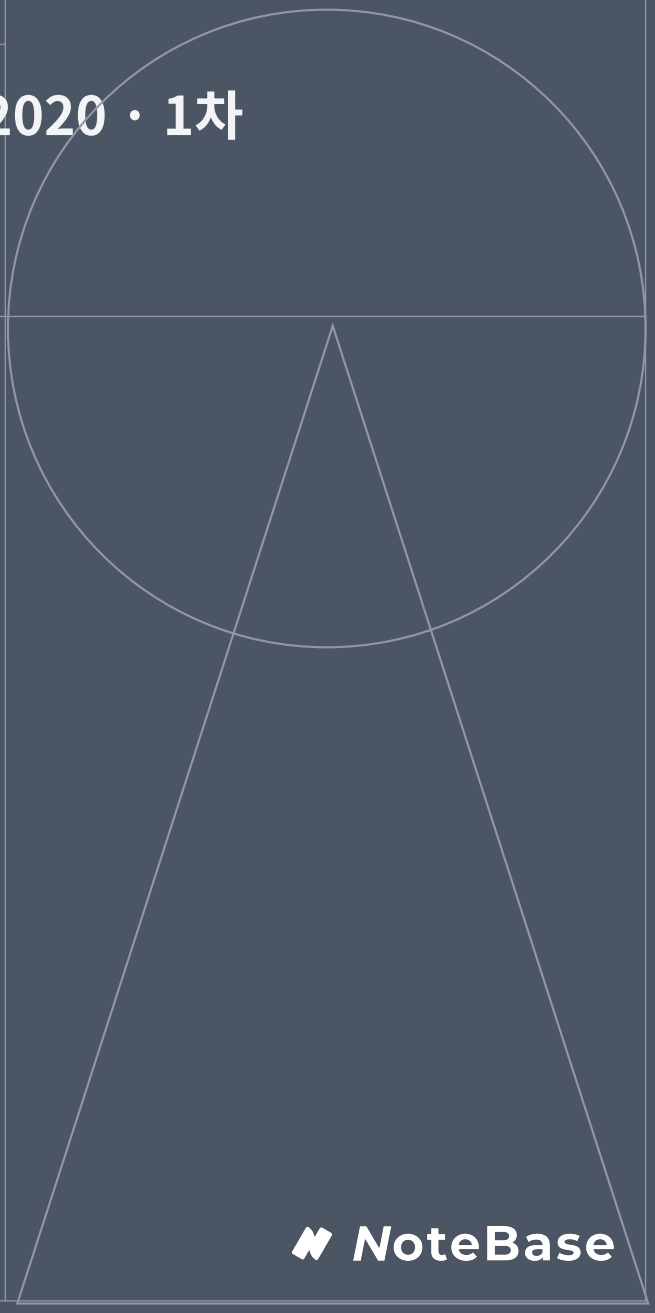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1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1차

공무원/해경/순경 · 사회 · 2020 · 1차

문 1. 다음 중 밑줄 친 (가)~(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북한에서 고위 공무원이었던 갑은 작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탈북해 왔다. 남한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갑은 (나) 남한 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북한에 두고 온 (다) 가족이 마음에 걸려 (라)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한의 한 (마)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갑은 (바) 돈을 모아 북한의 가족을 데려올 생각에 오늘도 힘을 내어 열심히 일을 한다.

<보기>
㉠ (가)는 갑의 내집단이자 준거집단이다.
㉡ (나)는 갑의 재사회화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다)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라)는 갑의 역할 갈등, (바)는 갑의 역할 행동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사례에 내집단·준거집단, 재사회화, 사회화 기관, 역할 갈등과 역할 행동의 개념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갑은 북한을 떠나 남한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규범에 적응하고 있다. 가족을 북한에 두고 온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남한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NoteBase

핵심 개념

준거집단은 개인이 태도나 행동을 정하고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재사회화는 기존의 생활양식이나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의 규범과 행동 방식을 익히는 과정이다. 가족은 일상적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화를 담당하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며, 직장은 성인이 새로운 지위와 역할을 익히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역할 갈등은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둘 이상의 역할이 서로 충돌하는 상태이고, 역할 행동은 지위에 따르는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행동이다.

적용 기준

사례의 단어만 보고 개념을 붙이지 않고, 새로운 규범을 습득하는지,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집단인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역할 요구가 실제로 충돌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의 '북한은 갑의 내집단이자 준거집단이다'라는 표현은 사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갑이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북한을 행동과 판단의 기준인 준거집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는 모습에서 남한 사회의 규범이 갑의 새로운 행동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②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올바른 조합은 ㉠ 대신 재사회화를 설명한 ㉡을 포함한 ㉡, ㉢이다.
③ O — ㉡은 갑이 남한 사회의 규범과 생활양식을 새로 익히는 재사회화이고, ㉢에서 가족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연구소라는 직장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므로 두 설명이 모두 옳다.
④ X — ㉡은 옳지만 ㉣이 옳지 않으므로 이 조합은 틀리다. ㉣의 '(라)는 갑의 역할 갈등이다'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라)는 서로 다른 역할 요구의 충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걱정에서 생긴 심리적 고통이다. 올바르게는 (바)의 연구원으로서 일하는 모습만 지위에 따른 역할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포인트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북한이 준거집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가족 걱정에서 생긴 심리적 갈등을 사회학의 역할 갈등과 혼동하기 쉽다. 역할 갈등은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둘 이상의 역할 요구가 충돌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새로운 규범을 다시 배우면 재사회화,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준거집단, 지위에 기대되는 행동을 실제로 하면 역할 행동으로 본다. 역할 갈등은 반드시 복수의 역할 기대가 서로 충돌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새 규범은 재사회화, 기준 집단은 준거집단, 역할끼리 충돌해야 역할 갈등이다.

NoteBase

문 2. 다음 표는 사회 조직 A, B의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와 탈관료제 중 하나에 해당한다.)

조직구성원의 재량권 정도	A < B
(가)	A < B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정도	(나)

① (가)에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

② (나)에는 'A < B'가 적절하다.

③ A와 달리 B는 효율성을 중시한다.

④ B보다 A는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의 대소 관계를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일반적 특성에 연결하여 A와 B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표에 제시된 '조직 구성원의 재량권 정도'에서 A < B를 확인한다.
2. 재량권이 작은 A를 관료제, 재량권이 큰 B를 탈관료제로 판별한다.
3. 업무 세분화, 중간 관리층의 역할, 효율성, 보상 기준을 두 조직의 특성과 대조한다.

핵심 근거

관료제는 업무가 세분화·전문화되고 위계가 뚜렷하여 구성원의 재량권이 작으며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크다. 반면 탈관료제는 권한이 분산되고 조직이 유연하여 구성원의 재량권이 크고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작다. 따라서 표에서 A는 관료제, B는 탈관료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표에서 (가)는 A < B인 특성이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의 세분화 정도는 관료제인 A가 탈관료제인 B보다 크므로 A > B이다. 따라서 (가)에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표현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업무의 세분화 정도는 A > B이다'이다.
② X — 표의 '중간 관리층의 역할 비중 정도'는 관료제인 A가 탈관료제인 B보다 크다. 따라서 (나)에 'A < B'가 적절하다는 표현은 틀리며, 올바르게는 '(나)에는 A > B가 적절하다'이다.
③ X — A는 관료제이고 B는 탈관료제이다. 일반적인 비교에서 효율성을 더 중시하는 조직은 관료제인 A이므로 'A와 달리 B는 효율성을 중시한다'는 방향이 반대이다. 올바르게는 'B보다 A가 효율성을 중시한다'이다.
④ O — 관료제인 A는 근속 연수와 지위에 따른 연공서열식 보상을 중시한다. 탈관료제인 B는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므로, B보다 A가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답 포인트

A와 B를 먼저 확정하지 않고 각 선지를 따로 판단하면 대소 관계를 거꾸로 읽기 쉽다. 특히 ②는 탈관료제가 수평적이라는 점을 놓치면 중간 관리층의 역할도 크다고 오인하기 쉽고, ③은 효율성과 유연성을 뒤바꾼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량권이 작고 세분화·위계·연공서열이 강하면 관료제, 재량권이 크고 수평적·유연하며 성과 중심이면 탈관료제로 판단한다. 표에서는 먼저 한 가지 확실한 지표로 조직 유형을 정한 뒤 나머지 항목의 대소 관계를 일관되게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관료제는 세분화·위계·연공서열, 탈관료제는 재량·수평성·성과 중심이다.

NoteBase

문 3. 다음 표에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 (가), (나)에 대한 진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계층 구분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범주화하여 이해

① (가)는 내부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② (나)는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다.

④ (가), (나) 모두 경제적 요소가 사회 계층을 나누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연속적인 범주로 보는 계급론과 연속적인 서열로 보는 계층론의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가) 계급론: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와 같은 하나의 핵심 기준에 따라 사회를 서로 구분되는 계급으로 나누는 관점이다. 계급 간 경계와 계급 내부의 귀속 의식을 강조한다.
(나) 계층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희소가치의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여러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사회 구성원을 연속적으로 서열화하는 관점이다. 계층 사이의 이동 가능성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 계급론은 서로 구분되는 계급 범주와 계급 내부의 공통 이해관계를 강조하므로 구성원 간의 강한 귀속 의식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② O — (나) 계층론은 사회 구성원을 연속적인 서열 위에 놓고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자유로운 사회 이동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가)는 (나)와 달리 연속적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다'이다. 올바르게는 (나) 계층론이 사회 계층화 현상을 연속적으로 서열화된 상태로 보고, (가) 계급론은 불연속적으로 구분되는 계급 범주를 전제한다.
④ O — (가)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경제적 기준을 중시하고, (나)도 소득·재산 등 경제적 요소를 사회 계층을 나누는 주요 기준으로 인정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계급론과 계층론의 핵심 특징을 서로 뒤바꾼 선지이다. '연속적 서열화'는 (가) 계급론이 아니라 (나) 계층론의 특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나의 기준·불연속적 구분·강한 귀속 의식이 보이면 계급론으로, 여러 기준·연속적 서열·자유로운 이동이 보이면 계층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계급론은 하나의 기준과 불연속적 범주, 계층론은 여러 기준과 연속적 서열이다.

NoteBase

문 4. 다음은 사회변동에 대한 두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사회는 끊임없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나아가는데, 이런 과정은 자연스럽고 지속적이다. 그리고 더 복잡한 사회일수록 인간의 생존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이 된다.
(나) 사회는 하나의 전체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회 체계를 붕괴하려는 힘이 나타날 때, 사회는 체계 자체를 최소한으로 변화시키는 수준에서 반등한다. 결국 사회 변동은 사회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보기>
㉠ (가)는 진화론적 사회 변동, (나)는 기능론적 사회 변동이다.
㉡ (가)는 사회가 단순 미분화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변동한다고 한다.
㉢ (나)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가)와 (나)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진화론과 기능론이 사회 변동의 방향, 원인, 양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하고 미분화된 상태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일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 체계로 보고, 변동을 균형이 깨진 뒤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점진적 적응 과정으로 이해한다.
㉠은 옳다. (가)는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나아간다는 진화론이고, (나)는 체계가 최소한의 변화로 균형을 회복한다는 기능론이다.
㉡은 옳다. 단순·미분화 상태에서 복잡·분화 상태로의 변동은 진화론의 핵심 설명이다.
㉢은 옳지 않다. 서구 사회를 발전의 최종 단계로 간주하여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은 (나)의 기능론이 아니라 (가)의 진화론에 해당한다.
㉣은 옳지 않다. 일정한 방향의 발전을 전제하는 것은 (가)의 진화론이다. (나)의 기능론은 변동의 방향보다 체계의 균형 유지와 회복을 강조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과 ㉡은 모두 옳으므로 정답이다.
② X — ㉢의 '(나)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그러한 비판이 (가)의 진화론에 제기된다고 해야 한다.
③ X — ㉣의 '(가)와 (나)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고 본다'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가)의 진화론만 단순·미분화 상태에서 복잡·분화 상태로 나아가는 일정한 방향성을 전제한다고 해야 한다.
④ X — ㉢과 ㉣이 모두 옳지 않다. ㉢의 식민 지배 정당화 비판은 (가)에 해당하고, ㉣의 일정한 방향성도 (가)에만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은 진화론과 기능론의 비판 대상을 바꾸어 놓았고, ㉣은 진화론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기능론에도 확대했다. 기능론의 핵심은 방향성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의 회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순에서 복잡으로', '미분화에서 분화로', '일정한 방향의 발전'이 보이면 진화론으로 판단한다. '상호 의존', '균형', '안정', '체계의 회복'이 보이면 기능론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진화론은 방향 있는 발전, 기능론은 균형의 회복이다.

NoteBase

문 5. 다음 <보기>에서 밑줄 친 ㉠과 ㉡의 현상에 대한 각각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제주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적인 폭설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설에 의한 ㉡ 대규모 비행기 결항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제주 공항 내 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다.

① ㉠은 가치 함축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② ㉠은 몰가치적이고, ㉡은 개연성을 지닌다.

③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

④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연 현상인 ㉠과 사회·문화 현상인 ㉡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연 현상은 인간의 의지나 가치 판단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몰가치성·존재 법칙·필연성과 확실성·보편성이 두드러진다.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사회생활 속 현상으로, 가치 함축성·당위 법칙·개연성과 확률성·보편성과 특수성·예외 가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연 현상은 보편적이고 예외가 적은 반면, 사회·문화 현상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예외가 비교적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을 '가치 함축적'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다. ㉠의 기록적인 폭설은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한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다. ㉡은 인간의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올바르게는 '㉠은 몰가치적이고, ㉡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이다.
② O — ㉠은 인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자연 현상이므로 몰가치적이다. ㉡은 인간의 의지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개연성을 지닌다.
③ X — ㉠이 ㉡보다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는 부분이 틀렸다. 자연 현상인 ㉠은 보편성이 강하고, 사회·문화 현상인 ㉡은 시대와 사회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특수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올바르게는 '㉡은 ㉠에 비해 더 많은 특수성을 지닌다'이다.
④ X — ㉠이 ㉡보다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는 부분이 틀렸다. 자연 현상인 ㉠은 인과 관계에 따라 필연적·확실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예외가 적고, 사회·문화 현상인 ㉡은 개연적으로 나타나 우연이나 예외가 비교적 많다. 올바르게는 '㉡은 ㉠에 비해 우연이나 예외가 많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의 '당위 법칙'이 맞다는 점 때문에 전체 선지가 옳아 보이지만, ㉠을 '가치 함축적'이라고 한 앞부분이 틀렸다. 한 선지에 두 개념의 특성이 함께 제시되면 두 부분이 모두 맞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간의 가치 판단과 무관한 자연의 변화이면 자연 현상으로 보고 몰가치성·존재 법칙·필연성·보편성을 연결한다. 인간의 의지와 사회적 관계가 개입된 현상이면 사회·문화 현상으로 보고 가치 함축성·당위 법칙·개연성·특수성·예외 가능성을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 현상은 몰가치·필연·보편,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개연·특수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중 일탈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별적 교제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

②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

③ 낙인 이론에 따르면 특정 행동이 일탈 행동이 되는 것은 사회가 일탈 행동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④ 기능론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각 이론과 그 핵심 원인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차별적 교제 이론: 일탈은 일탈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할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에서 일탈이 발생한다.
낙인 이론: 사회가 특정 행위나 사람을 일탈로 규정하고 낙인찍는 과정에 주목한다.
기능론: 사회 구조의 불균형이나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 이상에서 일탈의 원인을 찾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 행동이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본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일탈적 하위문화에 노출될 때 발생한다'이다. 이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 가까운 설명이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문화적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괴리로 일탈을 설명한다.
③ O — 낙인 이론은 행위 자체의 속성보다 사회적 반응과 규정에 주목하며, 사회가 어떤 행동을 일탈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일탈이 된다고 본다.
④ O — 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구성 요소의 체계로 보고,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 구조적 불균형에서 일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②는 '아노미'와 '일탈적 환경'이 모두 일탈의 원인처럼 보여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일탈 집단과의 접촉·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상호 작용·학습'은 차별적 교제 이론,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 '사회적 규정·낙인'은 낙인 이론, '사회 구조의 기능 이상'은 기능론으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교제는 학습, 머튼은 목표－수단의 괴리, 낙인은 사회적 규정, 기능론은 구조의 기능 이상이다.

NoteBase

문 7. 다음 중 행정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④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소송 절차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행정심판의 목적, 대상, 심리·재결 기관 및 행정소송과 비교한 장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처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핵심 구분

「행정심판법」 제1조는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권리구제 수단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행정심판법」의 목적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O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O — 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④ X — 행정심판은 행정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절차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시간과 비용이 증가된다'이다. 올바른 표현은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행정심판의 장점을 반대로 서술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비용 부담이 적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심판 관련 선지는 목적은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정한 운영', 대상은 '처분 또는 부작위', 시·도지사 사건의 기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과의 비교는 '신속·간편·저비용'인지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행정심판은 처분·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신속·간편·저비용의 권리구제 절차이다.

NoteBase

문 8.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접 민주 정치제도로만 묶인 것은?

㉠ 주민 발안제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
㉣ 지방 자치의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제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시행 중인 직접 민주 정치제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지방자치 차원의 주민 발안·주민 소환과 국가 차원의 국민 소환을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민 발안은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주민 소환은 주민투표를 통해 일정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핵심 구분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보장한다. 또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정한 지방의회의원 등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규정한다. 반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소환하는 국민 소환제는 현행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과 ㉣만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 주민 발안제는 시행 중이지만,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 틀린 표현: ㉠과 ㉡을 모두 시행 중인 제도로 묶은 것
- 올바른 표현: ㉠은 시행 중이나 ㉡은 시행되지 않으므로 둘을 함께 묶을 수 없다.

② X
- ㉡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모두 시행되고 있지 않다.
- 틀린 표현: ㉡과 ㉢을 시행 중인 제도로 묶은 것
- 올바른 표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 소환제는 현행 제도가 아니다.

③ X
- ㉣ 주민 소환제는 시행 중이지만, ㉢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 틀린 표현: ㉢과 ㉣을 모두 시행 중인 제도로 묶은 것
- 올바른 표현: ㉣은 시행 중이나 ㉢은 시행되지 않으므로 둘을 함께 묶을 수 없다.

④ O
- ㉠ 주민 발안제와 ㉣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소환제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직접 민주 정치제도이다.

오답 포인트

‘주민 소환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확대하면 틀린다. 현행 소환제는 지방자치 차원의 일정한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직접 민주 정치제도의 시행 여부를 물으면 먼저 지방자치 제도인지 국가 차원의 제도인지 구분한다.
주민조례발안과 주민소환은 시행 중이지만, 국회의원·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방에는 주민 발안·주민 소환, 국가에는 국회의원·대통령 국민 소환 없음으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9. 다음과 같이 주장한 근대 사상가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가가 결성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아무런 제약이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한다. 이 국가는 국민들이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이다.

㉠ 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보았다.
㉡ 간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아 국가에 주권을 일부 양도해야 한다고 보았다.
㉣ 저항권 행사에 의한 시민 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한 상태라고 보았다.
㉥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 실정권 사상과 관련이 깊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지문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 '일반 의지'는 루소를 가리킨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을 홉스·로크의 주장과 구별하여 옳지 않은 설명의 수를 세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정리

루소: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본다. 사회 계약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일반 의지에 따라 공동선을 실현하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으므로 직접 민주 정치를 중시한다.
㉠ O: 국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사회 계약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 X: '간접 민주 정치'가 틀렸다. 루소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아 직접 민주 정치를 옹호한다.
㉢ X: '주권을 일부 양도'가 틀렸다. 자연 상태의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권을 일부 위임한다는 설명은 로크에 가깝고, 루소는 주권의 양도와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 X: '저항권 행사에 의한 시민 혁명의 정당화'는 로크의 주장이다. 루소의 핵심은 일반 의지와 인민 주권이다.
㉤ O: 루소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한 존재로 본다.
㉥ X: '입법권과 집행권의 이권 분립'은 로크의 주장이다. 루소의 핵심 주장은 일반 의지에 기초한 인민 주권이다.
㉦ X: '실정권 사상'은 루소의 대표 사상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일반 의지에 기초한 인민 주권 사상과 관련이 깊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 ㉢, ㉣, ㉥, ㉦의 5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옳지 않은 설명은 2개가 아니라 5개이다. 올바른 수는 5개이다.
② X: 옳지 않은 설명은 3개가 아니라 5개이다. 올바른 수는 5개이다.
③ X: 옳지 않은 설명은 4개가 아니라 5개이다. 올바른 수는 5개이다.
④ O: 옳지 않은 설명은 ㉡, ㉢, ㉣, ㉥, ㉦으로 모두 5개이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의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앞부분만 보면 루소처럼 보이지만, 뒤의 '주권을 일부 양도한다'는 로크식 설명이다. 또한 ㉣의 저항권과 ㉥의 이권 분립도 로크의 주장이라서 루소의 일반 의지·인민 주권과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일반 의지'가 나오면 루소를 먼저 확정한다. 이어서 직접 민주 정치, 인민 주권, 주권의 양도·분할 불가, 성선적 자연 상태에 맞으면 옳고, 간접 민주 정치, 자연권의 일부 위임, 저항권, 이권 분립이 결합되면 로크의 주장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루소는 일반 의지·직접 민주 정치·인민 주권·주권 양도 불가이고, 로크는 자연권 일부 위임·저항권·이권 분립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표에서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인 A와 B에 따라 ㉠와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부형태 / 구분	A	B
장점	대통령 임기의 보장으로 정책이 지속되고 안정될 수 있음	㉠
단점	㉡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음

① ㉠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
㉡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

② ㉠ 책임 정치의 구현이 가능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

③ ㉠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됨
㉡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의 우려가 있음

④ ㉠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으로 의회와 내각 간 협조 용이
㉡ 입법부와 행정부 대립 시 조정이 곤란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표의 단서를 이용해 A와 B의 정부 형태를 판별하고,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A는 대통령제이다. 대통령이 의회와 별도로 선출되고 임기가 보장되는 정부 형태로, 정국과 정책의 안정성이 높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립하면 이를 조정하기 어렵다.
B는 의원내각제이다.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이 의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부 형태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 및 책임 정치에 유리하지만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표에서 A의 '대통령 임기의 보장'과 B의 '의회와 행정부를 장악한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 가능'은 대통령제의 장점이지만, ㉡의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도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에는 의원내각제의 단점인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음' 등이 들어가야 한다.
② X — ㉡의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음'은 의원내각제의 단점이지만, ㉠의 '책임 정치의 구현이 가능'은 의원내각제의 장점이다. ㉠에는 대통령제의 장점인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정국과 정책이 안정될 수 있음' 등이 들어가야 한다.
③ X — ㉠의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이 안정됨'은 대통령제의 장점이지만, ㉡의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독재 정치의 우려가 있음'은 대통령제의 단점이다. ㉡에는 의원내각제의 단점이 들어가야 한다.
④ O —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 다수파가 내각을 구성하므로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쉽다. 대통령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각각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양자가 대립하면 조정이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과 ㉡을 각각 B의 장점과 A의 단점에 맞게 연결한 선지이다.

오답 포인트

각 문장 자체가 익숙한 장단점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르면 안 된다. ①~③은 두 문장 중 하나는 해당 칸에 맞지만 다른 하나는 반대 정부 형태의 특징을 섞어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통령 임기 보장'은 대통령제, '의회 다수파의 내각 구성'은 의원내각제로 판별한다. 그다음 각 선지의 두 문장이 모두 지정된 정부 형태와 장점·단점의 위치에 맞는지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통령제는 임기 보장과 권력 분립, 의원내각제는 의회·내각의 융합과 책임 정치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헌법 내용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전문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 보장·사회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성을 할 수 있다.
㉠ 국민 투표
㉡ 공공 부조 제도
㉢ 최저 임금제 실시
㉣ 복수 정당제
㉤ 법치주의
㉥ 권력 분립 제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헌법 전문, 제34조, 제119조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회국가 원리와 그 실현 방안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를 찾는 것이다.

용어 풀이

사회국가 원리 = 국가가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 보장, 사회 복지, 소득 분배 등을 통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원리이다.

NoteBase

핵심 구분

헌법 전문의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 보장·사회 복지 증진 의무,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 분배와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은 모두 사회국가 원리를 나타낸다. ㉡ 공공 부조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 최저 임금제 실시는 근로자의 적정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므로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이다. 반면 ㉠ 국민 투표와 ㉣ 복수 정당제는 국민 주권·민주주의 원리, ㉤ 법치주의는 법치국가 원리, ㉥ 권력 분립 제도는 권력 통제의 원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과 ㉢의 2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1개'는 해당 제도의 수를 잘못 센 것이다. ㉡과 ㉢이 해당하므로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② O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은 ㉡ 공공 부조 제도와 ㉢ 최저 임금제 실시의 2개이다.

③ X
'3개'는 민주주의·법치주의·권력 분립의 실현 방안 중 하나를 사회국가 원리의 방안에 잘못 포함한 것이다.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④ X
'4개'는 서로 다른 헌법 기본 원리의 실현 방안을 함께 센 것이다. 사회국가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과 ㉢뿐이므로 올바른 표현은 '2개'이다.

오답 포인트

㉠ 국민 투표와 ㉣ 복수 정당제도 헌법상 중요한 제도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국가 원리의 실현 방안에 포함하기 쉽다. 이 문제에서는 '국민 참여'가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 복지, 실질적 평등, 소득 분배'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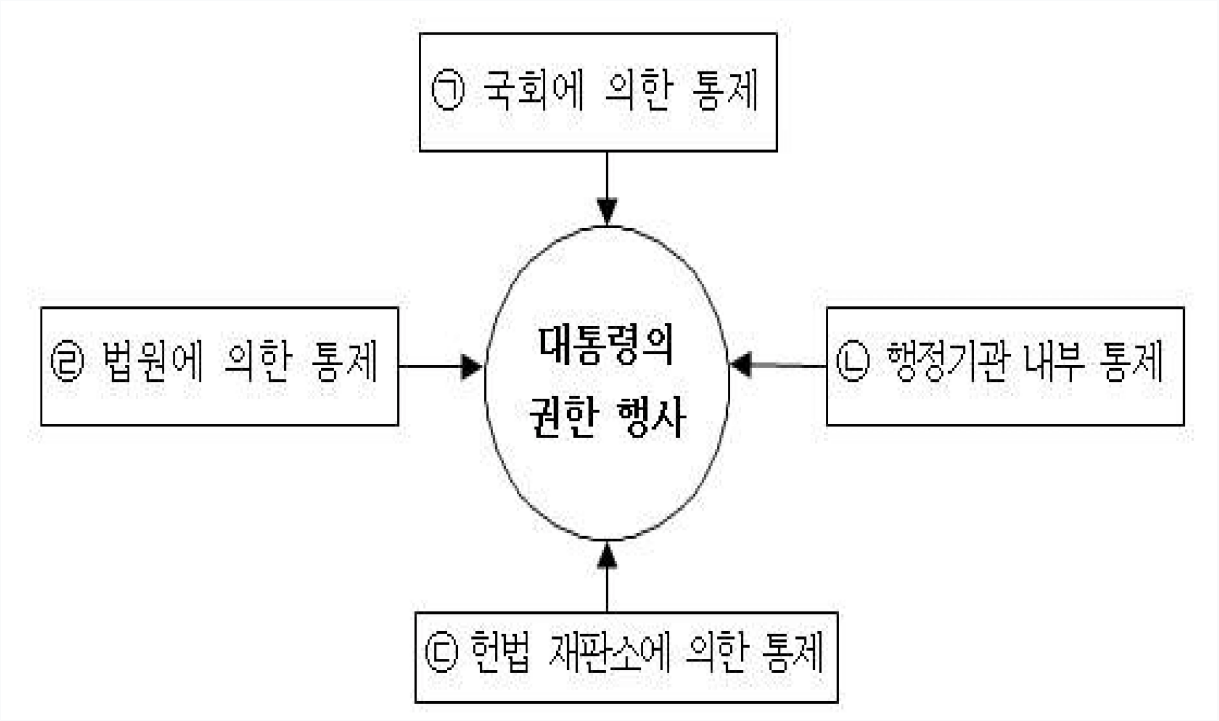
헌법의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에서는 제도의 목적을 먼저 확인한다. 복지·생존권·소득 재분배·경제적 약자 보호는 사회국가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 제도는 민주주의 원리, 법에 의한 국가 권력의 통제는 법치국가 원리, 국가 권력의 분산은 권력 분립 원리로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사회국가 원리는 인간다운 생활, 사회 보장·복지, 실질적 평등, 적정한 소득 분배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2. 다음 그림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국무 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③ ㉢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 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국가기관과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탄핵에서 소추를 의결하는 기관과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탄핵소추는 고위 공직자의 헌법·법률 위반을 이유로 파면 여부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다.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NoteBase

핵심 구분

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와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법원은 구체적 재판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헌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② O — 헌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통제에 해당한다.
③ X —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탄핵심판을 담당한다. 틀린 표현: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올바른 표현: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한다.’
④ O —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법원에 의한 통제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탄핵의 소추를 의결’과 ‘탄핵을 심판’을 혼동하기 쉽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을 최종 판단한다는 사실 때문에 소추 단계까지 담당한다고 오인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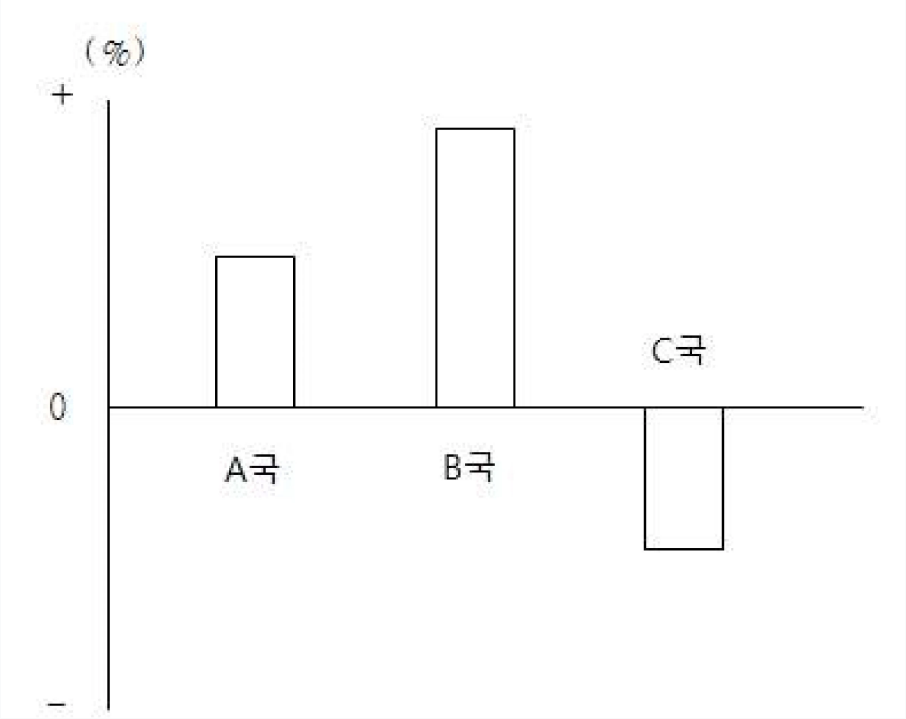
탄핵 문제에서는 절차를 두 단계로 나눈다. 먼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탄핵은 ‘국회가 소추, 헌법재판소가 심판’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그림은 미국 달러 대비 A국, B국, C국의 통화 가치 변동률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B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② C국의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③ B국으로 여행할 미국 사람은 B국 통화로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B국의 부품을 미국 달러로 결제하여 수입하는 A국 제조 기업의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미국 달러 대비 각국 통화의 가치 변동을 환율, 수출입 비용, 해외여행의 환전 시점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그래프에서는 A국과 B국 통화가 달러 대비 절상되고, B국 통화의 절상 폭이 A국보다 크며, C국 통화는 달러 대비 절하된다.

자료 읽는 순서

1. 세로축의 0보다 위이면 해당 통화가 미국 달러 대비 절상되고, 아래이면 절하된 것으로 읽는다.
2.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1달러를 사는 데 필요한 자국 통화의 양이므로, 자국 통화가 절하되면 상승한다.
3. 두 나라 사이의 거래에서는 달러 대비 변동 방향뿐 아니라 변동 폭도 비교한다. B국 통화의 절상 폭이 A국보다 크므로 B국 통화는 A국 통화에 대해서도 강해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그래프에서 B국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크게 절상된다. 그러면 미국 상품은 B국 통화로 환산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미국의 대B국 수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틀린 표현 '감소할 것이다'는 '증가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그래프에서 C국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절하된다. 자국 통화/미국 달러 표시 환율은 1달러당 C국 통화액이므로 C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 환율은 상승한다. 틀린 표현 '하락할 것이다'는 '상승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그래프에서 B국 통화는 미국 달러 대비 절상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앞으로 같은 B국 통화를 사는 데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므로, B국 여행을 계획한 미국인은 미리 B국 통화로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④ X — 그래프에서 B국 통화의 절상 폭이 A국 통화의 절상 폭보다 크므로 B국 통화는 A국 통화에 대해서도 절상된다. 따라서 A국 기업이 수입하는 B국 부품의 A국 통화 환산 가격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결제 통화가 미국 달러라는 사실만으로 상대가격 변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틀린 표현 '생산비는 인하될 것이다'는 '생산비는 상승할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통화 가치와 자국 통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같은 방향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④는 A국 통화도 달러 대비 절상되었다는 사실만 보고 비용 하락을 고르도록 유도하지만, B국 통화가 더 크게 절상되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상대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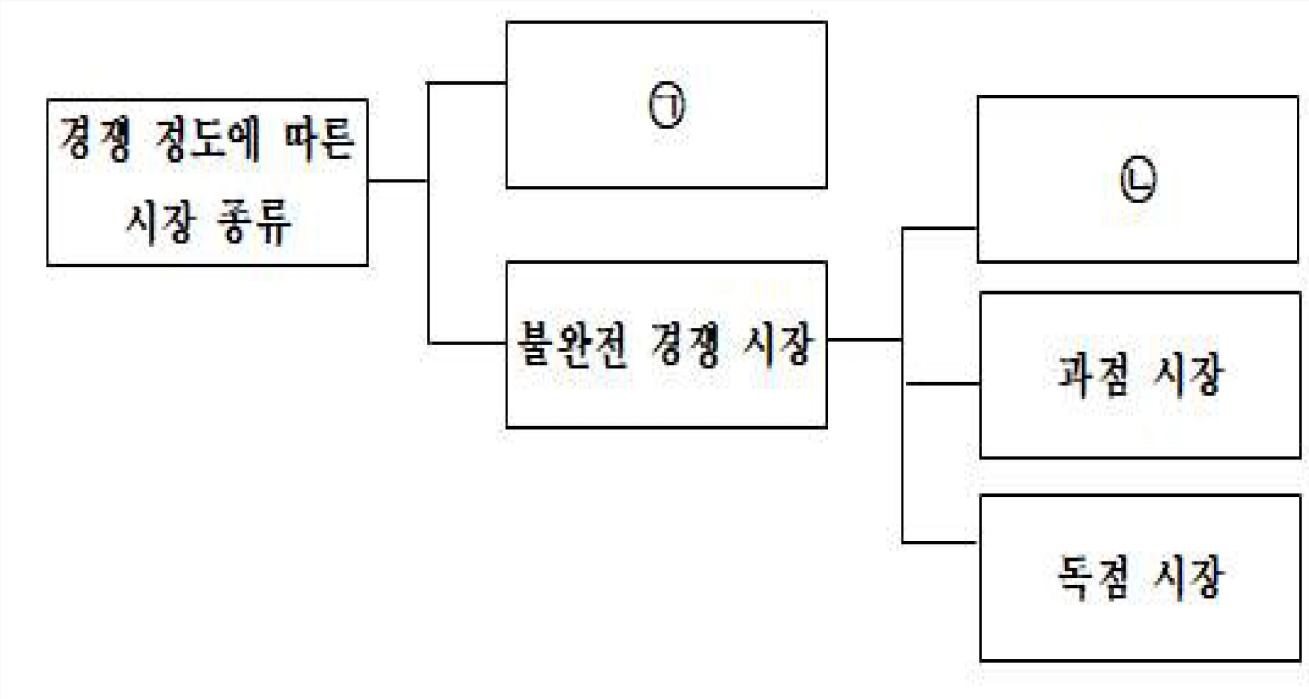
먼저 각 막대가 달러 대비 절상인지 절하인지 판별한다. 환율 표시가 자국 통화/달러이면 자국 통화 가치와 환율은 반대로 움직인다. 두 국가 간 수출입 문제에서는 두 통화의 달러 대비 변동 폭을 비교하여 교차환율의 방향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자국 통화 절상은 자국 통화/달러 환율 하락, 자국 통화 절하는 자국 통화/달러 환율 상승이다. 미래에 더 비싸질 외화는 미리 환전하는 편이 유리하다.

NoteBase

문 14. 다음은 경쟁 정도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빈칸 ㉠, ㉡ 시장의 특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① ㉠시장은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소비와 생산을 결정하는 시장이다.

② ㉠시장은 소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③ ㉡시장은 다수의 기업들이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④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도식에서 ㉠은 완전 경쟁 시장, ㉡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하면서 과점·독점 시장과 나란히 분류되는 독점적 경쟁 시장임을 파악하고, 각 시장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완전 경쟁 시장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개별적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여 소비량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② X — '소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라는 표현이 틀렸다. 완전 경쟁 시장에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 소수의 수요자가 구매력을 행사하는 시장은 수요과점 시장에 해당한다.

③ O —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업이 서로 어느 정도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④ O — 독점적 경쟁 시장은 일반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완전 경쟁의 핵심을 '공급자가 많다'는 한 가지 조건으로만 기억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수이고, 어느 한 경제주체도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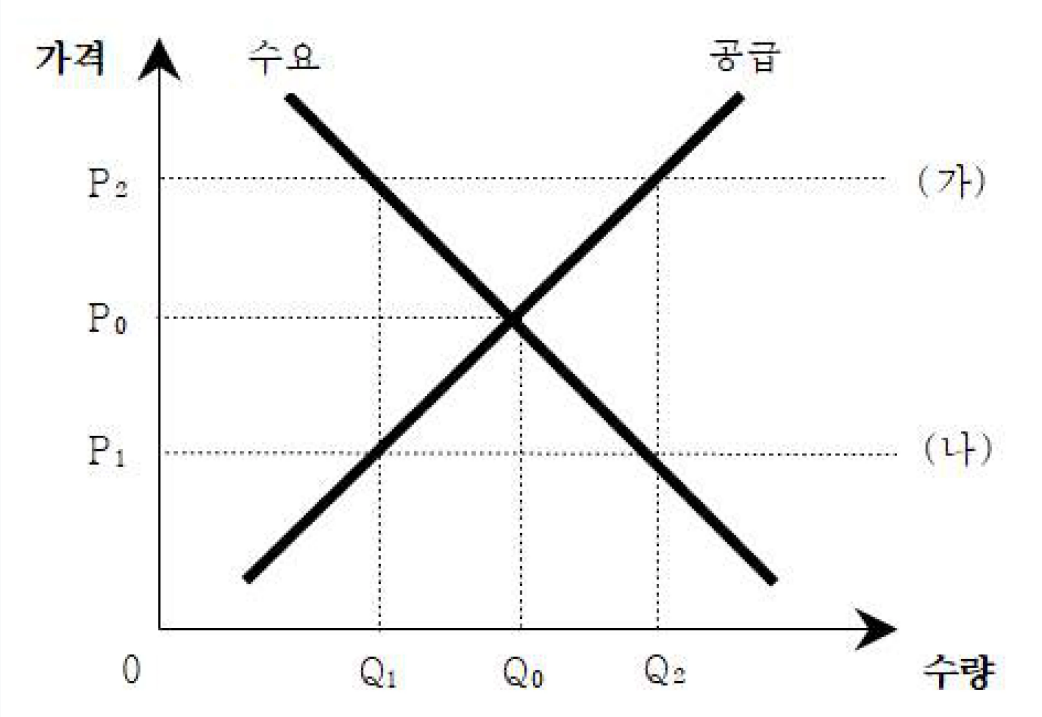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 분류 도식에서는 먼저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을 나누고, 불완전 경쟁을 독점적 경쟁·과점·독점으로 세분한다. 그다음 완전 경쟁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 및 동질적 상품, 독점적 경쟁은 다수의 기업과 차별화된 상품이라는 기준으로 선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 경쟁은 다수·동질·가격수용, 독점적 경쟁은 다수·차별화·낮은 진입장벽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그림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나)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② 분양가 상한 제도는 (가)보다 (나)에 해당한다.

③ (가)에서 가격 규제를 시행하면 $Q_1 \sim Q_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④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규제 제도는 (나)보다 (가)에 해당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균형가격 P_0보다 높은 (가)의 P_2는 가격하한이고, 균형가격보다 낮은 (나)의 P_1은 가격상한이다. 가격하한에서는 초과 공급이, 가격상한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나)는 가격을 균형가격보다 낮게 제한하는 가격상한이다. 이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 재화가 부족해지므로, 웃돈 거래와 같은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② O - 분양가 상한 제도는 분양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는 가격상한이므로 (나)에 해당한다.

③ X - (가)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하한이므로 수요량은 Q_1, 공급량은 Q_2가 되어 $Q_2 - Q_1$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틀린 표현인 '초과 수요'는 '초과 공급'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공급자를 보호하려면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는 가격하한을 설정하므로 (가)에 해당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수량 차이 $Q_2 - Q_1$ 자체는 맞게 제시하면서 시장 불균형의 방향만 '초과 수요'로 바꾼 선지이다. 가격하한에서는 높은 가격 때문에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위에 있으면 가격하한·초과 공급·공급자 보호, 아래에 있으면 가격상한·초과 수요·소비자 보호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은 하한이면 남고, 상한이면 모자란다.

NoteBase

문 16. 다음 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의 유무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크게 A, B, C, D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소비의 배제성	
		유	무
소비의 경합성	유	A	B
	무	C	D

①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② 가정용 냉장고는 A의 영역에 포함될 것이다.

③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B, D에 해당한다.

④ D에서는 시장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 유무를 표에서 읽어 사적 재화, 공유 자원, 요금재, 공공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행에서 소비의 경합성 유무를 확인한다.
2. 열에서 소비의 배제성 유무를 확인한다.
3. 두 속성을 결합하면 A는 사적 재화, B는 공유 자원, C는 요금재, D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핵심 근거

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을 줄이는 성질이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성질이다. 표에서 C는 경합성이 없고 배제성이 있으므로 요금재이며, D는 두 성질이 모두 없는 공공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C는 표의 '경합성 무·배제성 유' 영역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C에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이다.
② O - 가정용 냉장고 한 대는 특정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할 수 있고, 같은 냉장고를 여러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동시에 소비하는 재화도 아니므로 '경합성 유·배제성 유'인 A의 사적 재화에 해당한다.
③ O - B와 D는 모두 표의 '배제성 무' 영역이다.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이용에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O - D는 '경합성 무·배제성 무'인 공공재 영역이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 어려워 민간 시장에서 비용을 회수하기 힘들고, 그 결과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답 포인트

①은 C의 열에 표시된 배제성만 보고 사적 재화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선지이다. C의 행은 경합성 '무'이므로 다른 사람의 소비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과 반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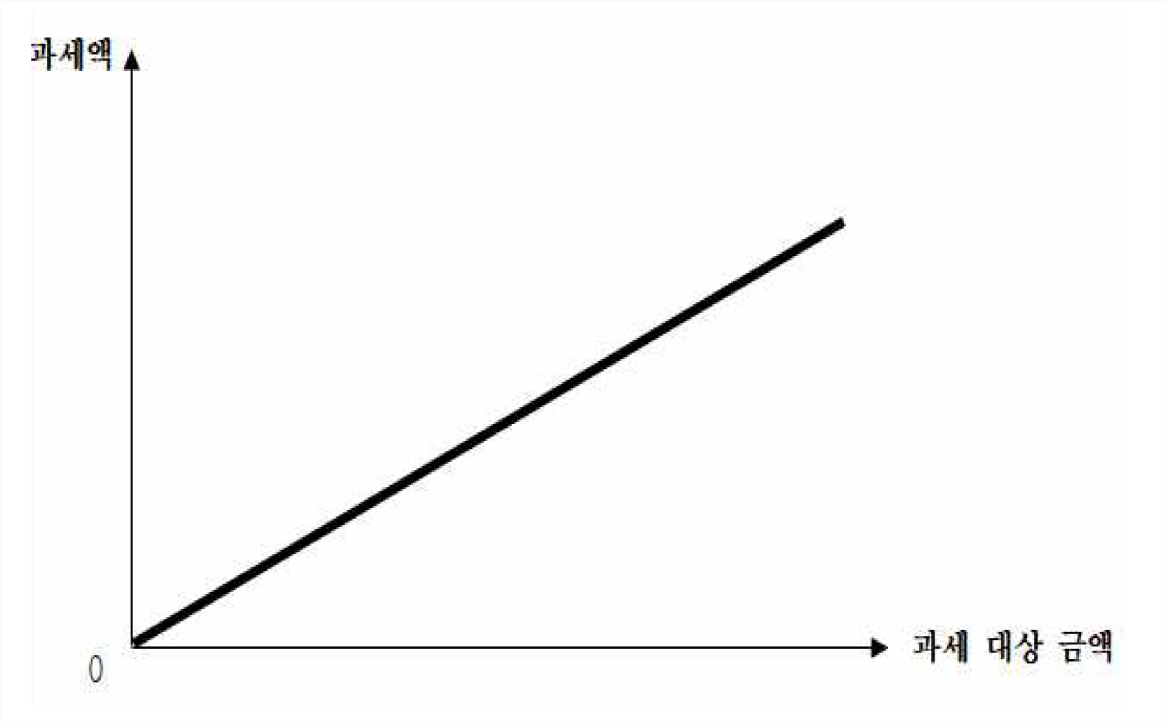
먼저 경합성은 '남이 소비하면 내 몫이 줄어드는가', 배제성은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을 수 있는가'로 판별한다. 그다음 유·유는 사적 재화, 유·무는 공유 자원, 무·유는 요금재, 무·무는 공공재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유·유 사적 재화, 유·무 공유 자원, 무·유 요금재, 무·무 공공재이다.

NoteBase

문 17. 다음 <보기> 중 그림이 나타내는 조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누진세 방식이다.

㉡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다.

㉢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은 일정하다.

㉣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과세 대상 금액과 과세액이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 관계이므로 세율이 일정한 비례세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 X. 그래프는 과세 대상 금액이 늘어도 과세액의 기울기가 일정하므로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 방식이다. 틀린 표현 '누진세'는 '비례세'로 고쳐야 한다.
㉡ X.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방식이다. 틀린 표현 '그림의 비례세 방식이 적용된다'는 '누진세 방식이 적용된다'로 고쳐야 한다.
㉢ O. 비례세는 과세 대상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므로 그래프가 일정한 기울기의 직선으로 나타난다.
㉣ X. 비례세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저소득층에 특별히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 '저소득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로 고쳐야 한다.

① O.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가 맞다.
② X. '2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1개'이다. ㉠·㉡·㉣은 모두 틀리다.
③ X. '3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1개'이다. 옳은 설명은 ㉢뿐이다.
④ X. '4개'는 틀리며, 올바르게는 '1개'이다. 네 설명이 모두 옳은 것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과세액이 증가한다는 사실만 보고 누진세로 판단하면 안 된다. 누진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자체가 높아져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지고, 비례세는 과세액은 늘어도 세율과 기울기가 일정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로축이 과세 대상 금액이고 세로축이 과세액인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세율로 판단한다. 직선의 기울기가 일정하면 비례세, 기울기가 점점 커지면 누진세,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 역진세이다.

암기 포인트

비례세는 같은 세율·같은 기울기,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다.

NoteBase

문 18. 다음 표는 B기업의 X재 생산량에 따른 총수입과 평균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생산량(개)	1	2	3	4	5	6
총수입(만원)	8	16	24	32	40	48
평균비용(만원)	5	6	7	8	9	10

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

②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되는 생산비용은 커진다.

③ 모든 생산량에서 이윤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

④ 생산량이 5개일 때 이윤이 극대화 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총수입과 평균비용으로 가격, 총비용, 한계비용, 이윤을 계산하여 각 선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량은 1개부터 6개까지이고, 총수입은 8만원씩 증가한다. 평균비용은 생산량에 따라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이다.
구해야 할 값은 가격, 총비용, 한계비용, 이윤이다.
평균비용 자체가 아니라 생산량을 곱한 총비용을 먼저 구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가격=총수입/생산량
총비용=평균비용× 생산량
한계비용=총비용의 증가분
이윤=총수입-총비용
가격은 단위당 수입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을 1개 더 늘릴 때 추가되는 총비용이므로 위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모든 생산량에서 X재의 가격은 8만원이다.
2. 총비용은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하므로 생산량 1개부터 6개까지 각각 5만원, 12만원, 21만원, 32만원, 45만원, 60만원이다.
3. 생산량이 1개씩 늘어날 때 총비용의 증가분은 1개에서 2개로 늘 때부터 각각 7만원, 9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으로 커진다.
4.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값이므로 생산량 1개부터 6개까지 각각 3만원, 4만원, 3만원, 0원, -5만원, -12만원이다. 따라서 이윤은 생산량 2개일 때 4만원으로 극대화된다.

선지 판단

① X —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눈 가격은 각 생산량에서 모두 8만원이므로 가격은 하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X재의 가격은 하락한다'는 'X재의 가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8만원으로 일정하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생산량을 1개씩 늘릴 때 추가되는 총비용은 7만원, 9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으로 계속 커진다.
③ X — 이윤은 3만원, 4만원, 3만원, 0원, -5만원, -12만원이므로 모든 생산량에서 항상 양의 값이 아니다. 틀린 표현 '항상 양(+)의 값을 가진다'는 '생산량 4개에서는 0이고, 5개와 6개에서는 음(−)의 값을 가진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생산량 5개일 때 이윤은 -5만원이고, 최대 이윤 4만원은 생산량 2개일 때 발생한다. 틀린 표현 '생산량이 5개일 때'는 '생산량이 2개일 때'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평균비용의 증가분을 추가 생산비용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추가 생산비용인 한계비용은 평균비용이 아니라 총비용의 증가분으로 판단한다. 또한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윤도 항상 증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총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에 총수입과 평균비용이 주어지면 가격은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고, 총비용은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한다. 이어서 총비용의 증가분으로 한계비용을,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로 이윤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비용에 생산량을 곱하면 총비용, 총비용의 증가분은 한계비용,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면 이윤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S여객선 회사는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A노선과 B노선에 대해 여객선 승선권의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에 따른 승선객 수의 변동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단, 승선권의 현재 가격은 10만 원이며, 가격 외에 다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격 변동	수요량 변동			
	A 노선		B 노선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전	변동 후
1만 원 하락	10만 명	15만 명	10만 명	10만 5천 명
1만 원 상승	10만 명	5만 명	10만 명	9만 5천 명

① A노선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② B노선은 가격 변동률보다 판매 수입 변동률이 작다.

③ A노선은 가격 변동 방향과 판매 수입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

④ 판매 수입 증대를 위해서 A노선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B노선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을 할 것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가격 변동률과 수요량 변동률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고, 가격 변화에 따른 판매 수입의 방향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현재 가격은 10만 원이고 두 노선의 현재 수요량은 각각 10만 명이다. 가격이 1만 원 하락하면 A노선은 15만 명, B노선은 10만 5천 명이 되고, 가격이 1만 원 상승하면 A노선은 5만 명, B노선은 9만 5천 명이 된다. 따라서 가격 변동률은 10%이며, A노선의 수요량 변동률은 50%, B노선의 수요량 변동률은 5%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다.
E_d=|수요량 변동률||가격 변동률|
또한 판매 수입은 가격× 판매량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계산 과정

A노선의 가격 탄력성은 50% ÷ 10% = 5이므로 탄력적이다. 가격 인하 때 판매 수입은 10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증가하고, 가격 인상 때는 55억 원으로 감소한다.
B노선의 가격 탄력성은 5% ÷ 10% = 0.5이므로 비탄력적이다. 가격 인하 때 판매 수입은 100억 원에서 94억 5천만 원으로 감소하고, 가격 인상 때는 104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선지 판단

① O — A노선의 가격 탄력성은 5이므로 1보다 크다.
② O — B노선의 가격이 10% 변할 때 판매 수입은 가격 인하 시 5.5% 감소하고 가격 인상 시 4.5% 증가하므로, 판매 수입 변동률의 절댓값은 가격 변동률보다 작다.
③ X — A노선은 탄력적이므로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틀린 표현인 '변동 방향이 일치한다'는 '변동 방향이 반대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A노선은 가격을 내릴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B노선은 가격을 올릴 때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오답 포인트

수요량이 늘거나 줄었다는 사실만 보면 ③을 고르기 어렵다.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A노선에서는 수요량 변화의 효과가 가격 변화의 효과보다 커서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량 변동률을 가격 변동률로 나누어 탄력성이 1보다 큰지 확인한다. 그다음 탄력적이면 가격과 판매 수입은 반대 방향, 비탄력적이면 같은 방향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탄력적 수요는 가격과 판매 수입이 반대로 움직이고, 비탄력적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NoteBase

문 20. 다음 표는 A국의 고용 상황과 관련된 통계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

(단위: %)

구 분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2004년	45	4
2014년	55	5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 100

①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고용률은 감소하였다.

②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③ 2004년에 비해 2014년에는 취업 준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④ 2004년에 비해 2014년의 비경제 활동 인구수는 감소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이용해 취업자·실업자·비경제 활동 인구의 비율을 계산하고, 전체 집단의 변화와 그 하위 집단의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2004년과 2014년의 15세 이상 인구를 동일한 N명으로 둔다.
2004년: 경제활동 참가율 45%, 실업률 4%
2014년: 경제활동 참가율 55%, 실업률 5%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며, 비경제 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뺀 인구이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경제활동 인구=N×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자=경제활동 인구×실업률
취업자=경제활동 인구×(1-실업률)
고용률=취업자N×100
비경제 활동 인구=N×(1-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이므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함께 적용해야 한다.

계산 과정

2004년 취업자는 $N \times 0.45 \times 0.96 = 0.432N$이므로 고용률은 43.2%이다. 2014년 취업자는 $N \times 0.55 \times 0.95 = 0.5225N$이므로 고용률은 52.25%이다.
2004년 실업자는 $N \times 0.45 \times 0.04 = 0.018N$이고, 2014년 실업자는 $N \times 0.55 \times 0.05 = 0.0275N$이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04년에 $N \times 0.55 = 0.55N$, 2014년에 $N \times 0.45 = 0.45N$이다.

선지 판단

① X — 고용률은 2004년 43.2%에서 2014년 52.25%로 증가하였다. 틀린 표현 '감소하였다'는 '증가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② X — 실업자 수는 $0.018N$에서 $0.0275N$으로 증가하였다. 틀린 표현 '감소하였다'는 '증가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 취업 준비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의 일부이지만, 표에는 취업 준비자 수나 그 구성 비율이 없다. 따라서 취업 준비자 수의 증감은 알 수 없다. 틀린 표현 '증가하였다'는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 비경제 활동 인구는 $0.55N$에서 $0.45N$으로 감소하였다. 두 해의 15세 이상 인구가 같으므로 비율의 감소는 인구수의 감소를 뜻한다.

오답 포인트

실업률이 4%에서 5%로 올랐다는 사실만 보고 실업자 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를 분모로 하므로,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함께 반영해야 한다. 또한 비경제 활동 인구 전체가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하위 집단인 취업 준비자 수도 감소하거나 증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5세 이상 인구를 N으로 두고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 인구 → 실업률을 적용한 실업자와 취업자'의 순서로 계산한다. 하위 집단의 자료가 없으면 전체 집단의 증감만으로 그 하위 집단의 증감을 추론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실업자, 실업률의 분모 =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의 분모 = 15세 이상 인구이다.

NoteBase